

'정권심판' 주창 이재명

공천갈등 일축·비례제 침묵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서 “공천 과정 갈등·분열 크지 않아” 밝혀
당내 일각 “자객 출마 용인·친명 공천 현실화하나”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날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비판하며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장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공천 과정에서 당이 분열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갈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천 과정도 경쟁적이고 본질적으로 경쟁은 갈등을 수반한다”면서도 “어떤 선거 공천 과정과 비교해도 오히려 갈등이나 분열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당의 당헌·당규에 맞춰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불거진 공정성 시비에 더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들을 향한 친명계의 공격이 거세지며 계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당내에서는 비명계 현역의원의 지역구를 노리는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과 원의 인사들의 자객 출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친명 인사들이 정권 심판론과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586 정치인과 문재인 정부 출신을 향해 총선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다.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에도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분이 관심 있고 이해관계도 있어 신중하게 의견 수렴하고 있다”면서 “갈지 않은 시간에 이문제도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가 병립

형 회귀를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싣고자 당원 투표로 입장을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4년 전 총선 때 준연동형을 밀어붙이면서 내걸었던 선거개혁 약속과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등을 위해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도 강한 상황이다.

소속 의원 절반가량인 80명은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정부 심판 믿음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반발했고, 정의당 등 야권 성향의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는 병립형으로의 퇴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번 신년 회견을 놓고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결단이 시급한 핵심 현안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 중진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공정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고 친명계 인사의 자객 출마가 뻔히 보이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회피한다”며 “공천 갈등이 커지면 총선에도 악재가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약속했으면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자객 출마는 이재명 대표 작품이라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친명 공천인지는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리더십의 한계가 아니라 부재”라며 “책임감이 있는 리더라면 감성 지지층이 등을 돌리더라도 중요한 의제는 적시에 결단해야 한다.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으니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약속했으면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당 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공천 잡음 및 갈등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유불리만 따지느라 수개월째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뒤통스런 장단점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날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장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결정이 더 늦어지면 선거제 확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오명까지 다 뒤집어 쓴다”고 우려했다.

반면 비주류 의원 사이에서도 신년 회견은 4월 총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은 피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번 신년 회견은 정책과 비전 방향을 짚은 것 같다”며 “공천과 선거제에 대한 입장은 의원총회 등에서 지도부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민주, 영입인재 12명과

'전국투어 토크콘서트'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 대비 영입 인재들과 함께 전국 투어 토크 콘서트를 연다. 2월 1일 서울 일정을 시작으로 2월 한 달 간 전국 10곳에서 진행된다.

전국 투어의 시작인 서울 콘서트는 1일 오후 7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서울 행사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주요 지도부도 참여한다.

이어 △4일 대전 △5일 광주 △14일 부산 △18일 전주 △20일 대구 △21일 청주 △25일 제주 △26일 원주 △29일 부천 순으로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 인재위는 박지혜 변호사 등 총 12명의 인재를 영입,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김성규 원장 후보자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지난날 31일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자치도의회, 김성규 전북콘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업무능력·도덕성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김성규 원장 후보자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위원장 이병도)가 지난날 31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번 인사청문회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7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콘텐츠 관련 경력이 떨어지는 후보자의 원장 적합성, 경영평가 개선방안, 시군별 콘텐츠 자원사업 사후관리와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 등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검증 등을 위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어갔고, 후보자가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ESG경영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을 꼬집어 ESG경영 업무의 중요성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후보자의 추상적인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K-콘텐츠 산업이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K-콘텐츠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원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에 임했다”고 밝혔다.

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 이해도, 도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무주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지난날 31일 제30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6일까지 7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다.

회기 첫날인 31일 무주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황인동)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문은영, 부위원장 황인동)위원을 선임하고,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문은영 의원은 2024년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활성화 방안 제안을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관련기사 9면)

이해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주군의회는 2024년, 침체된 경기와 민생의 회복에 집중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무주지소가 개소하게 된 것처럼 의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한해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무주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공무원연금, 지역민 반발 속 전북·광주지사 통합 강행

전북서 공단 대상 비판 목소리 더 거세질 듯

공무원연금공단이 전북지사와 광주지사 통합을 밝힌 가운데 지역민 반발에도 통합운영 강행의지를 보이면서 전북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단은 지난날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전북지부와 광주지부를 통합해 ‘광주·전북지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과거 대면으로 이뤄지던 업무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SNS·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돼 지부의 대면 민원응대역할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면서 “소규모 지부 운영(전북지부 정원 6명)에 따른 가능 수행의 한계와 인력 운영문제,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성과 효율성 높은 공단 경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공해 왔던 모든 서비스는 통합지부에서 변함없이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